

‘성희롱’ 목포시의회 비난 여론 거세

시민단체 “윤리특위 구성, 2차 피해 우려”

“의회 본연 업무 차질·시 이미지 타격”

목포시의회의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가 ‘성희롱 의혹’ 의원 제명에 이어 가해의원이 피해 여성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논란이 확산함에 따라 의회가 목포시정 발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한 채 시의 이미지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이후 동료 여성시의회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훈 전 의원을 지난 12일 제명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피해자인 A여성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연천회 저녁 자리에서 A의원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소주를 입에 흘려 부어 넣었다’는 등 혐의를 진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주 운영위원회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향후 일정과 징계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진정서가 들어온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했고, 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성희롱 의혹’ 의원의 피해 여성의원에게 윤리특위 제소와 목포시의회가 이를 수용한 처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목포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 앞에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성희롱 가해자인 김훈 전의원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동조해서는 안된다”며 “김 전 의원의 요구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책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기계적 형평성을 들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 성희롱을 은폐하고 가해자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윤리특위 구성 논의만으로도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다시 한 번 노출된 것”이라며 “윤리특위 구성은 시의회가 스스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성희롱에 동조하는 기만행위이자 피해자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피해 여성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 결정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성희롱’ 본질을 흐리고 자신이 살아남고자 하는 얕은 수”라고 일축했다.

목포시의회의 ‘성희롱 의혹’은 더

불어민주당 도당의 김 전 의원의 당적 박탈, 피해 여성의원에게 검찰 고소 시의회의 김 전 의원 제명, 피해여성의원 윤리위 제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성희롱을 둘러싼 파장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목포시는 물론 의회의 이미지 저하와 시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박모씨(58)는 “목포시가 9월 초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활성화, 내년 예산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의회가 내부사안인 ‘성희롱’ 문제에만 매몰돼 표류하고 있다”며 “빨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해엄치는 자카스펭귄들 절기상 처서를 사흘 앞둔 2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자카스펭귄들이 파란 하늘을 날듯 헤엄치고 있다.

자수하러 온 피의자 놓아준 경찰, 당직 시스템 전면검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자수를 하러 온 ‘한강 몸통사신’ 사건 피의자를 당시 당직자가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인근 경찰서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당직 시스템 전면 검토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직근무 체계와 근무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사실관계를 감찰 조사해서 엄중하게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직 시스템 검토와 관련해 “개인의 잘못인지 구조적인 잘못인지 처음부터 다시 복기를 해보는 차원”이라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매뉴얼 등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의자 A씨(39)는 지난 17일 오전 1시11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에 “자수를 하겠다”며 찾아왔다. A씨는 당시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직자는 A씨를 인근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했다.

안내실에는 일반적인 당직 근무 매뉴얼이 있었지만, 자수자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일반적인 당직 매뉴얼이 있다”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인 당직 매뉴얼의 사건 처리 방침만 지켜도 A씨를 그냥 보내줄 일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자수자 처리에 대해서도 당직 매뉴얼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사건 처리 규정대로 인접 경찰서에 순찰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면 됐을텐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민감동 경찰청정도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

상황이든 자수 받은 경찰관이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어긋난 행위에 대해 감찰 조사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이러한 행태들이 개인별로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전체 교육을 시키면서 행여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1시 1분 안내실에 들어와서 1분 정도 머무르다가 떠났고, 오전 1시3분을 넘겨 종료 경찰서 정문에 도착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안내실에는 의무경찰 2명과 일반부서 당직자(경사급) 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수능 응시 접수 내일부터 시작

오는 11월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이 지나면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22일부터 다음달 6일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

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5개 이상 약물 복용 노인, 사망 위험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노인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한 노인을 5년간 추적 검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사망위험이 25%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단은 20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장태익 건보공단 일산병원 내과 교수 연구진)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우선 65세 이상(2012년 기준 노인 중 2012년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임원이 없는 300만7620명을 분석했다.

대상자 중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은 46.6%였다. 이들 가운데 노인이 피해야 할 약물 또는 특정질환이 동반된 경우 피해야 할 약물을 처방받은 이른바 부적절 처방 비율은 47.0%로 조사됐다. 이는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대조군)의 부적절 처방률 13.8%보다 33.2%p 더 높은 수치다.

뉴스1

이슈 판결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무기징역 “일주일새 3명 생명 빼앗아”

공범 징역 30년 선고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중에 인천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와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0일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50만 원, 공범 B씨(34)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 혼자 사는 아버지(66)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공범 B씨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주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자 시신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과 조현병 치료 전력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심신 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국립공주병원의 정신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B씨와 아버지 살인 사건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 인천 노부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경찰에 감금되기 전까지 생명의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주일 사이에 무고한 3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공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서천에 내려 갔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서천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죽어야 한다”며 “A씨와 함께 구체적으로 A씨의 아버지 살해 계획을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은 서천까지 범행 도구를 갖고 A씨와 함께 내려 갔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점 등을 볼 때 A씨에 의한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노부부를 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A씨의 추가 범행을 주도해 이에 상응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절저히 강도 살인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친척 살인범 유형범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했다”며 A씨에게는 사형,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때, 자발적으로 응진 민력어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